

제2호

KU-GSIS
Policy Brief

디지털 혁명 시대의
국가인권정책 패러다임

서 창 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018. 6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서 창 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crsoh@korea.ac.kr>

디지털 혁명의 특징은 초연결성(super-connectivity)과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다.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지구촌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신기술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등장하면서 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급격한 환경변화는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광범위한 정책영역에서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국가중심 정책들의 관행적 프레임워크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기술혁신에 따른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가운데, ‘보다 나은 인간적 삶의 구현’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문제해결의 근원적 패러다임으로서 인권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개별정책들을 다양한 인권적 가치들과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산업화제도화 하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상생협력의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

2016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의제로 4차 산업혁명이 채택된 이후, 세계 각국은 디지털 혁명 기반의 새로운 산업패러다임의 확산이 글로벌 경제와 국제사회에 가져올 변화와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그 범위와 영향력에 있어 과거 산업혁명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적 변혁을 보인다. 1~3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노동능력을 부분적·기능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하는 기술적 진보였다면, 4차 산업혁명은 과거 산업혁명에서 나타났던 제한적 기술변화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뛰어넘는 양상을 보인다. 지금까지 인간 고유의 노동영역으로 인식되었던 ‘창의적 사고력’ 과 ‘감성적 커뮤니케이션’ 을 요구하는 과업들까지도, 고효율 저비용을 앞세운 디지털기술이 빠른 속도로 인간을 대체하며 수행해나가고 있다.

일례로,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래학자들조차 단기간에는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던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이제는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의 행동패턴을 분석하고 감성을 공유하는 인공지능(AI)이 등장하면서, 각국 정부가 이러한 기술혁신의 결과들을 산업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사회제도를 정책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파격적인 기술혁신이 체감적으로 현실화되어가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초석이 되어온 대량생산체제 중심의 산업기반 자체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011년 독일 정부는 인더스터리 4.0 (Industry 4.0), 즉 지능형 생산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 중심의 제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개념적 시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다보스포럼에서 제시된 목표처럼, 4차 산업혁명을 ‘보다 인간적인 사회구현’을 위한 국가발전전략의 한 축으로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2016년 대통령 집무실 산하 과학기술정책국(OSTP: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이 디지털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AI 7대 개발전략과 함께 AI의 발전 및 적용확대에 따른 사회 및 공공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일본 정부는 2016년 1월 발표한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속에 제4차 산업혁명과 동일한 개념의 ‘초스마트사회(Society 5.0)’의 비전을 제시하고 동년 4월과 6월에 각각 발표한 『신산업구조 비전: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일본의 전략』, 『일본 재흥전략 2016: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하여』에서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일본 사회가 직면한 국가적 과제의 해결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 우리 정부도 2017년 대통령 직속 산하기구로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이 산업구조개선을 통한 경제성장과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경제사회 전반의 대변혁을 위한 정책추진과 규제완화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디지털 혁명 시대에 궁극적으로 인간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국가인권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2018년 현재 전세계 38개국에 채택하고 있고, 우리정부가 최근 제3차 계획 초안을 공개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 of Action): 2018~2022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인권이슈로 부각되는 ‘개인정보보호’,

‘노동권’, ‘교육권’ 그리고 혁신기술의 산업화 주체인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기업과 인권’ 등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이번 초안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경우 IT 기술발전으로 인한 대량의 개인정보 침해 현황 및 구체적인 보호정책까지 함께 제시되고 있다. 그에 비해 자동화로 인한 구조적, 기술적 일자리 감소에 따른 ‘노동권’의 보호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또한 기술혁신으로 인한 산업노동수요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진입 전 준비단계, 참여단계, 조기퇴직은퇴 후 재진입 단계를 포괄하는 국가차원의 전 생애주기적 통합적 ‘교육권’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2차 국가인권계획까지는 포함되지 않았던 ‘기업과 인권’ 조항이 3차 인권계획부터 포함된 것은 기술혁신에 따른 인권적 문제들이 기업활동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2011년 『유엔의 기업과 인권 가이드라인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이 자발적 국제기업인권책임 준수규범으로 발표된 이후 2018년 현재까지 영국미국독일 등 전세계 20개국 정부가 이미 국가인권계획과는 별도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인권계획 (NA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채택하였고 일본, 태국을 비롯한 20여 개국이 준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 세부내용 면에서도,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이행에 대한 국가적 프레임워크와 가이드라인의 제시 없이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대한 기대 표명(선언)’을 정부부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 이는 EU가 2014년도부터 500인 이상 기업의 연 1회 ‘비재무적 보고(인권포함) 의무화’와 같은 명확한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것과는 큰 차이이다.

디지털 혁명은 더욱 높은 생산성과 편리성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인간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도전을 수반한다. 따라서 인간을 중심에 둔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인권친화적 국가발전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산업혁명 초기에 심각한 노동착취와 환경파괴를 예상하고 이를 위해 미리 대비했다면 인류는 극심한 인권침해와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명 시대의 새로운 인권적 도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대비를 통하여

미래세대에게 기술혁신을 발판으로 보다 나은 인간적인 사회를 선물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세계경제와 국제사회의 흐름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에 의한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이 기존의 산업구조 및 사회제도와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해줄 국가인권정책의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저자 소개

서창록 교수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자 인권센터장이다.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인권 NGO인 휴먼아시아 대표이기도 하다. 아시아지역 인권레짐, 기업과 인권, 북한 인권 등 다양한 주제로 인권을 연구하고 있으며, 연구를 통한 지식을 UN과 NGO활동, 정책개발에 적용하여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